

# 의안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7.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대전제3.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따 로 불 임
4. 검토의견 : 따 로 불 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8년 5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환 구

대전광역시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8년 5월 7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수질환경보전법」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및 제13조 등).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오염총량초과  
부과금이 신설됨에 따라 부담금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의2 등).
-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도 배수설비 공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 및 제15조).

###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폐수처리장의 수선·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환경관련 전문 사업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12조 및 제13조 등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 안 제2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의2 등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오염총량초과부담금이 신설됨에 따라 부담금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안 제7조에서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폐수처리장의 수선·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사설업 등록을 한 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함.
- 안 제11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4조에서는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용어의 순화 및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
- 안 제13조 및 제15조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
- 안 제16조에서는 관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 안 제29조에서는 증가산금 조항을 정비하라는 규제 개혁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삭제 정비함.
- 별지서식에서는 서식명칭을 제명에 맞도록 정비함.

##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조항이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7. 11. 17부터 시행되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인용하고 있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관련 조항이 2007. 1.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7. 7. 3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의2 등과 관련되는 오염총량초과 부담금 내용이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신설되어 2007. 11.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와 관련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폐수처리장의 수선·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사설업 등록을 한 자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인용조문 정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상위법 개정과 행정여건이 변화되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1993. 8. 24 조례를 제정하여 세차례에 걸친 기본적인 조례개정 이후 2003. 9. 19를 끝으로 지금까지 후속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바, 앞으로는 상위법령개정 등 개정사유가 발생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리로 조례개정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